

현장과 시각

光發研원장 정치감투 버려라



정후식

사회1부 부장

21세기 광주 발전을 선도할 싱크탱크(think tank)의 수장이 특정 정당의 지역위원장을 맡아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체일병 선임 광주발전연구원장의 정치 견적에 대한 적절성 시비다.
채 원장은 광주발전연구원 이사회에서 3년 임기의 원장으로 선임돼 지난 10일 취임한 뒤, 13일에는 자신이 17대 국회의원으로 있던 민주당 해남·진도 지역구의 지역위원장으로 선정됐다.
이같은 채 원장의 정치활동, 그것도 특정 정당과 지역구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역할은 광주의 미래 비전을 설계하는 정책연구기관 대표의 역할과는 상충될 수밖에 없다. 특히 민주당 지역위원장 자리가 갖는 성격상 정치적으로 휘둘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립성 시비로 광주 현안 등과 관련 다른 정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채 원장은 최근 광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도대체 왜 겸직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하며 “잘 해나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채 원장은 ‘정치인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선 임 당시부터 구설수에 올랐다. 해남·진도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이 광주 발전전략을 짜는 종합정책연구기관의 선장으로 적절하느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정당 조직을 이끌겠다고 나서는 것은 우선 임명권자인 이사장, 즉 광주시장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나아가 겸직 자체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치더라도 자체 윤리강령에 위배된다. 현행 광주발전연구원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제10조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후원회 가입 등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동안 현역 국회의원들이 주로 맡아 왔던 지역위원장은 다가올 지방선거의 공천과정과 정치행사 등을 사실상 주도하는 위치여서 이를 겸할 경우 연구원장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오는 8월이면 개원 1주년을 맞는 광주발전연구원 시 내부에서 조차 제약을 못하고 있다는 불만소리가 흘러나오곤 했다. 정권 교체기에 자칫 지역현안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상황에서 대응 논리를 적극 제공해야 할 시기였기에 더욱 그랬다.
당면 과제도 산적해 있다.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와 균형발전정책 후퇴를 저지하고 무한경쟁시대 광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특화된 전략을 내놓아야 한다.
다행인 것은 행사 출신인 채 원장이 총무처와 행정부 등에서 30여년동안 다양한 경험과 인맥을 다져온 점이다. 이를 새로운 광주 발전 비전을 설계하는데 적극 활용하되 불필요한 정치적 옹호는 피해야 한다. 이제 채 원장이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who@kwangju.co.kr

국회, 임기 개시 한달째 파행

민생 현안 등 입법기능 마비...공전 장기화 우려
한나라-민주 원내대표 접촉 등원 합의 또 실패

18대 국회와 30일로 임기 개시 한달째를 맞았지만 개원을 하지 못한 채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한나라당은 거대 여당으로서 정치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면서 야권의 등원을 압박하고 있으나 통합민주당 등 야 3당은 쇄고 고시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장외 총력투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의정단 선출 못해>=이에 따라 18대 첫 임시국회 회기종료일인 다음달 4일까지 개원이 안될 경우 국회 사상 최초로 첫 임시회 기간에 의정단이 선출되지 못하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산적한 민생 현안>=국회가 한달째 공전하면서 시급한 민생법안도 쌓여 가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고유가 극복 후속대책이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휴대전화

사용료 인하, 건설경기 부양을 목표로 한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방안 등도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할 뿐이다.
정부는 지난 17일 4조9천여원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또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 1천400만명에게 연간 24만원의 세금을 환급해 주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등 종횡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국회가 역할을 못해 정부의 약속 이행이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최고기 파동을 해소하기 위해 강화하기로 한 원산지 표시제도 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정상화는 아직도(?)>=이런 가운데 여

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밑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나 조기 정상화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고시 강행 이후 단독 개원도 불사하겠다는 야권의 등원을 압박하고 있다. 단독 등원을 논의하기 위해 30일 의원총회를 연다.
하지만 등원할 때가 아니라는 민주당의 입장은 여전하다. 차령 대변인은 29일 “굴욕협상의 원인제공자가 정부고, 촛불문화제로 표현된 국민의 뜻을 묵살한 게 청와대고, 가속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하지 않고 있는 당이 한나라당”이라면서 등원 거부 입장을 재천명했다.
한편 한나라당 홍준표, 통합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9시50분부터 1시간 10분 가량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18대 개원 방안과 등원 조건 등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회동에서 가시적인 합의점을 도출하는데는 실패했으나 전향적 해법을 모색하자는 데는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부인 유순복 여사가 28일 일본 교토에서 전통 다도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아시아를 순방중인 반 총장은 일본 홋카이도에서 열리는 G8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중국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반기문 총장 취임 후 첫 日 방문 한중일 3국 순방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해 취임 후 첫 한·중·일 3국 공식 순방을 위해 28일 낮 나리타 국제공항을 통해 첫 방문지인 일본에 도착했다.
반 총장은 다음달 1일까지 4일간 일본에 체류하면서 지구온난화 대책과 관련,

교토의정서가 채택됐던 교토시를 방문하며, 30일에는 후쿠다 야스오 총리, 고무라 마사히코 외상과 회담을 갖는다. 아키히토 일왕과의 회담도 예정돼 있다.
반 총장은 일본 방문을 마친 뒤 중국을 거쳐 모국인 한국을 취임 후 처음으로 방

문한 뒤 7일에는 다시 일본에 도착해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개최되는 세계 주요 8개국(G8) 정상회담에 참석할 예정이다.
반 총장의 이번 일본 방문은 유엔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3대 과제로 제시한 식량 위기, 지구 온난화, 아프리카 개발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에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한 세계 여론을 환기시키는데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연합뉴스

동물 체온 결정 뇌 유전자 비밀 풀었다

KAIST 김재섭 교수팀 초파리 연구 통해 세계 첫 규명

국내 연구진이 초파리의 뇌 연구를 통해 동물들이 생명활동을 하는 데 가장 적합하도록 체온을 유지하는 메커니즘을 밝혀냈다.
KAIST 생명과학과 김재섭 교수팀은 29일 초파리가 주변 환경의 온도에 따라 체온을 결정하는 과정이 뇌에서 이뤄지며 이때 체내 화학물질인 ‘cAMP(사이클릭 AMP)’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 연구결과는 뇌가 체온 조절에 직접 관여한다는 것을 처음 밝힌 것으로 국제학술지 ‘네이처’ 30일자 온라인판에서 ‘금주’의 주요 논문으로 채택돼 공개됐다.
연구진은 또 사람의 체온을 조절하

는 중추신경이 뇌 시상하부에 있으나 초파리는 이 부위가 신경 다발이 양송이 모양으로 뭉쳐 있고 기어과 화습을 담당하는 곳인 ‘버섯체(mushroom body)’에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초파리 뇌 버섯체에서 cAMP의 농도가 높아지면 ‘PKA’라는 효소의 활성이 증가하면서 체온을 높여야 하는 신호가 나오게 된다.
연구진이 유전자 조작을 통해 버섯체에서 국소적으로 cAMP의 농도를 낮추자 초파리가 찬 곳으로 이동하는 등 체온을 낮게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반대로 cAMP 농도를 높였을 때는 체온을 높게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성 김 “부시 임기내 북핵 3단계 완수”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28일 부시 행정부 임기내에 북핵 3단계 목표를 완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 폭발현장을 지켜보고 한국을 방문한 성 김 과장은 이날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시점에서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회견문에 따르면 그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북핵보고서를 검증하고, 다음 단계이자 마지막 단계인 비핵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6자회담의) 다른 당사국들과 협력한다면 그 과제(3단계)를 완수할 가능성도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성 김 과장은 영변 냉각탑 폭발에 소요된 비용을 미국이 부담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지불하지) 않았다. 북한이 불발화를 위한 행동을 취한 뒤 항복별로 정리한 청구서를 제출하면

우리는 검토후 사실과 부합하면 지불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성 김 과장은 “우리는 북한의 불발화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 왔으며, 냉각탑도(불발화의 일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일 뿐 다른 의미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냉각탑 폭발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500만 달러의 비용을 미국에 청구했고 미국은 250만 달러를 제공했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실제로 비용이 지불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성 김 과장은 냉각탑 폭발의 사전 준비 작업에는 10~14일 정도가 걸린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전준비에서부터 실제 폭발작업까지 전 과정을 북한 전문가들이 했고 미국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유가폭등 해법 찾을까...세계 석유회의 개막

국제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세계석유회의(WPC)가 29일 나흘 일정으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막된다.
‘과도기의 세계 :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에너지 인도’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전세계 60개국 4천명 이상의 대표단이 참석한다.
대표단에는 각국 에너지 장관을 비롯해 BP, 로열더치 쉘, 엑손모빌, 가스프롬 등 원유 메이저 경영진들도 대거 포함돼 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에서 소집된 ‘석유 생산국-소비국 회의’가 유가폭등의 해법을 찾기 못하고 막을 내린지 일주일 만에 열리는 것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주최 측은 “전세계 원유, 천연가스 생산의 95%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회원국들이 참석하는 데다 유가 폭등이 전세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상태에서 이번 회의에는 각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Dongbu Gosihakwon (동부고시학원) featuring '08년 7월 여름방학 대특강 (08년 7월 여름방학 대특강) and '합격률 1위 기념' (합격률 1위 기념) promotion.

Advertisement for a 10th anniversary event (재혼만 10년!) featuring a couple and a list of services.